

뉴욕시 “정신이상 노숙자 강제 입원”



▲ 뉴욕 지하철역에서 노숙자에게 질문하는 경찰. 사진=shutterstock

최근 길거리와 지하철에서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 뉴욕에서 정신이상 증상을 지닌 노숙자의 강제 입원이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애덤스 시장은 거리나 지하철 등에 정신이상 증상의 노숙자가 발견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강제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이라면서 정신이상 증상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 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뉴욕에선 시 보건 관계자 등이 심각한 정신이상 증상이 확인된 노숙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더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곧바로 퇴원 조처가 내려졌다. 또한 뉴욕경찰(NYPD)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숙자가 지하철에 들어올 경우에도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뉴욕시가 정신이상 노숙자에 대한 강제 입원 조치를 결정한 것은 강력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뉴욕시의 강제 입원 정책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비 로젠탈 뉴욕정신재활서비스협회의 대표는 “정신 이상 증상을 지닌 노숙자에 대한 애덤스 시장의 접근방식은 과거에도 실패한 방식으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미 총기 사망률 28년래 최고

지난해 미국의 총기 사망률이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예모리대 의대 크리스 리스 교수와 하버드대 의대 에릭 프리글러 교수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1990~2021년 총기 사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110만 명이상이 총기 살인과 자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지난해 미국의 총기 사망률이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shutterstock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총기 사망자가 25%나 급증했으며, 지난해 총기로 숨진 사람은 4만8천953명으로 이는 인구 10만 명당 15명꼴이라고 설명했다.

성별 및 인종 간 총기 사망자 격차는 매우 컸다. 전체 총기 사망자 가운데 약 86%는 남성이었다. 또 지난해 총기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7배 높았다. 인종 간 격차는 이보다 훨씬 컸다. 지난해 20~24세 흑인 남성의 총기 살인율은 10만 명당 1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전체 총기 사망률보다 10배 높고

백인 남성보다는 22배나 높은 것이다. 지난해 총기 자살률은 80~84세 백인 남성(10만 명당 47명)에서 가장 높았다.

크리스 리스 교수는 “이 연구는 총기 사망의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하지만 특정 인종이나 계층, 연령 등이 총기로 숨질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특정 그룹의 총기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동성결혼 권리보장법 상원 통과

미국에서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명문화한 법률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결혼 존중법’을 61대 36으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12명도 찬성에 표를 던졌다.

앞서 지난 7월 하원도 같은 취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법제화를 위한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미국은 이미 2015년 대법원의 동성결혼 허용 판결로 동성결혼 권리가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보수 절대 우위인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동성결혼

허용 판례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불법화하기 전에 연방 법률로 동성결혼 권리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종교 자유 보장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킨 수정안이 제시되자 모르몬교 근거지인 유타주 출신인 및 톰니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찬성으로 돌아섰다.

모르몬교는 최근 동성결혼에는 반대하지만 동성결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의 차기 대표 켈리 로빈슨은 “우리 커뮤니티는 승리가 필요했다. 지금 안도감을 느낀다.” 고 AP통신에 말했다.

	1 반	신	2 욕		3 조	통	4 박
5 무	대		6 심	7 장	부		주
가				닭		8 연	
9 지	10 불		11 허		12 악	습	
	13 호	언	장	담		14 장	15 화
	령		성				문
16 확		17 영	세	18 민		19 구	석
20 정	중	동		21 물	굽	이	

